

##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대학교육 방향

이 경 희\*

### 목 차

- |                     |                      |
|---------------------|----------------------|
| I. 문제제기             | IV. 새로운 통일교육체계의로의 전환 |
| II. 통일교육의 현재성       | V. 결론                |
| III. 통일환경의 변화와 대학사회 |                      |

### 〔 논문 요약 〕

본 논문은 대학통일교육이 행해지는 구조적인 형태가 한국사회의 구조적 측면인 신자유주의의 확산이라는 프레임에서 형해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통일교육이 통일교육과 정합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대학통일교육의 프레임을 구축하고자 한다.

대학교육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의 교화내지 교조화를 방지하고 바람직한 미래상을 추구해야 하지만 대한민국에서의 대학교육은 아쉽게도 정권과 기득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틀이 형해화되었고 현재도 그러한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학통일교육은 통일담론의 당위성의 강조라는 한계와 기능인화하는 대학의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여, 한국사회의 긍정적인 개조에 필요한 틀을 모색하고자 한다.

대학에서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은 구성원들이 정치체제의 효율성 제고 및 정당성의 확보, 사회적 통합기능담당, 민주적 정치발전을 위한 차세대 민주시민의 양성 기능이라는 점에서 강조된다. 그러나 현재 한국대학은 취업과 단순 지식연마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이러한 기능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환경과는 거리가 멀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사회의 통치방식이 구성원들을 억압하고 배제시켰던 지배방식이 아닌 신뢰구축과 소통을 통해 갈등을 처리함으로써 실질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대학통일교육은 계몽이 아닌 자기주도적 인식의 확장 차

\* 호남대학교 교수

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학통일교육은 타자를 승인하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 동일성과 실득을 통해 일방적 교육을 시도하는 방식에서 탈피하고 ‘통치’(government)행위가 아닌 탈근대사회의 포괄적 ‘협치’(governance)방식이 확산되는 과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다.

주제어: 대학통일교육, 신자유주의, 대학의 기능화, 민주시민, 탈근대사회, 포괄적 협치.

## I. 문제제기

필자를 비롯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언제부터인지 “한국의 통일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이렇다 할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2000년 6.15선언 2항의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한 논의에 대해 이해하는 자가 얼마나 될지, 그에 대해 알고 노력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이명박 정부의 3대공동체론에 대해서도 명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 자가 얼마나 될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통일교육 전문가이든 대학교수들이 어떤 통일론으로 어떻게 교수하는지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도 녹녹치 않을 것이다. 요즘의 대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담론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무지와 무관심을 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통일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동시에 뜨거운 감자다. 누구도 그 중요성을 부인하지 않지만 항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쟁점으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정치적 게임의 단골메뉴가 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이후 드러나기 시작한 남남갈등 이래, 통일에 대한 논의가 이념적 논쟁, 정략적 계산, 파당적 주장 및 경제적 타산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통일론과 통일정책을 수립뿐만 아니라, 이를 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교육현장에서도 합의된 교육 대안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이란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거나 실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기보다 사람들의 꿈과 이상 속에 목표상태로 자리 잡고 있는 가치이자 실현되지 못한 미래목표이다. 한국은 단일민족으로 역사상 존재해 왔기 때문에, 근대국체체제에서도 단일한 민족국가로 존재해야 한다는 당위에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이러한 당위적이고 목적론적인 사고의 경향은 통일이 한편으로 정서적인 가치를 동반하면서 강력한 동원력을 행사하는 주제임에도 이에 대한 세밀한 탐구가 별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sup>1)</sup>

통일교육 역시 통일에 이르는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1) 박명규, “통일연구와 통합지수: 지수화의 방법론과 이론적 과제,” 『통일과 평화』, 제2집 2호(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10), p. 5.

사회의 묵시적 합의하에 초중등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통일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사회적 동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역사적 경험과 현재의 교육여건을 고려할 때 통일교육은 시행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대학을 비롯한 각급 학교기관에서 통일교육은 국가중심 통일담론의 온존이 이루어지면서 체제유지적이고 일방적이면서도 비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교육대상에 대한 고려 없이 대동소이한 통일교육이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기보다는 일방적인 주입식 강의 위주의 교육이 중심을 이루었다. 앞으로도 그 방향과 내용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추진된다면 과거 권위주의체제 시절의 반공교육과 같이 지배집단의 체제유지에 기능하는 교육으로 전락하거나 오히려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교육이 될 수도 있다.

대학통일교육, 특히 취업에 필요한 스펙(specification)쌓기에만 몰두하는 대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은 한낱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에 불과할 수도 있다. 현재 대학에서 통일교육은 내용도 대상도 거의 없는 공백상태라고 생각한다. 대학교육에서 통일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들이 적지만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를 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거의 실종되다시피 한 대학통일교육에 관한 연구로서, 왜 이러한 현실이 되었는지에 대해 천착해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와 그에 포획된 한국대학사회의 기업성을 통해서 한국의 대학과 대학생, 그리고 대학통일교육의 현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대학통일교육을 통해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을 제고하는 사회적 프레임의 전환에 대해 탐색해보고자 한다.

참여모델, 협치모델, 심의모델, 신뢰와 소통의 확산 등을 통해서 통일논의와 담론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실천가능'하고 '적용가능'한 대학통일교육을 모색하며 “한국의 사회변동에 대비한 대학통일교육의 방향”이라는 제언적 과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다음 두 가지에서 점에서 기존의 대학통일교육을 논한 논문과 차이가 있다. 첫째는 대부분의 논문들이 김대중/노무현정부의 통일정책과 이명박정부의 통일정책과 그에 따른 통일교육의 지침 및 내용을 차별화시킨다. 그러나 필자는 87년 민주화이후 수립된 김대중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의 통일교육의 큰 흐름이 본질적으로 일방적 교육, 당파적 교육, 이데올로기적 교육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시각에서 고찰하였다.

둘째는 기존의 논문들은 대학통일교육의 틀 내에서 지향점과 지양점 등을 분석했지만, 한국사회의 구조적 측면인 신자유주의의 확산이라는 프레임에서 대학통일교육이 형해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도 대학통일교육을 선언적이면서도 명쾌하게 어떤 내용과 어떤 방향, 어떤

지향으로 해야 할 지에 대한 정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지만 끊임없이 고민하고 문제제기를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 II. 통일교육의 현재성

### 1. 국가중심 통일담론의 온존

정부 주도, 교과서 중심의 통일 교육은 이미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다. 지금까지의 통일 교육이 사람/사회의 존재조건의 변화와 부응하지 못한 채, 국가안보 교육과 당위로서의 통일 교육이 사람들의 일상과 생활에 연관되지 못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의 외면을 가속화시켰고, 북한에 대한 이해와 성찰을 유예시키는 현실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은 정부 통일정책의 변천과정에 따라 변화해 왔다. 크게 보아 통일교육은 반공교육 → 통일, 안보교육 → 통일교육의 과정을 겪어왔으며, 지금까지 방공교육, 멸공교육, 승공교육, 국방 안보교육, 이데올로기 비판교육, 이념교육, 안보교육, 국민정신교육, 통일대비교육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이루어졌다.<sup>2)</sup> 이러한 과정에서 2000년 이전의 통일 관련 교육은 체제 우위와 반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정권 유지/체제유지라는 목적에 일차적 의미가 있다는 비판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급변으로 통일정책의 패러다임도 변화하였다. 기본방향은 안보·통일 중심의 교육에서 화해·협력 중심의 교육으로, 통일지향은 정치·제도적 통합중심의 교육에서 사회·문화적 통합중심의 교육으로, 교육목표는 안보·체제우위 통일지향의 중심에서 상호이해·협력 공동체 지향의 중심으로, 교육주체는 정부 주도에서 정부 민간협력체제로, 교육내용은 체제이념 중심·남한의 비교우위 강조에서 생활문화의 이해·남북한의 객관적 비교로, 교육방법은 일방적 전달, 제한된 정보자료, 수동적 참여에서 개방적 토론 다양한 정보자료 능동적 참여로 나타났다.<sup>3)</sup> 즉 통일에 관한 논의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는 것보다는 남북 간의 서로 다른 문화와 생활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중심에 두며, 교육자 중심이 기보다는 교육의 수요자를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접근의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으로 전환하였다<sup>4)</sup>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은 북한에 대한 관여(engagement)를 추진하여, 북한의 개혁, 개방을 이끌고, 더 나아가 경제공동체를 통하여, 평화와 협력,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입장을 같이하면서 다만 이를 추진하는 방법에서 북한에 대해

2) 이우영, "대학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새로운 통일담론의 필요성," 미발표원고, p. 33.

3) 윤황,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국민윤리연구, 제58호(2005), p. 231.

4) 조정아, "통일교육의 쟁점과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2007), p. 291.

원칙적인 관여의 모습을 강화할 지, 아니라면 장기적 상호성을 기대한 채, 지속적인 협력 기조를 유지해야 할지에 관한 정책적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이명박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노무현정부의 평화변영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하고, 동시에 정부의 공식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하여 적극 실천해간다는 의도 아래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체계화되었다. 이는 화해협력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평화로운 남북관계의 발전을 추구하는 가운데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 나아가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sup>5)</sup> 통일정책의 핵심은 '비핵·개방·3000 구상'으로, 북한이 비핵화(핵 폐기)와 개방이라는 대결단을 내리면 한국은 국제사회와 더불어 경제·교육·재정·인프라·복지 등 5대 분야의 포괄적 패키지 지원을 통해 10년 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불이 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 구상은 조건부 '선(先)비핵화-후(後)대북지원' 원칙을 천명하였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고 개혁개방에 나서지 않는다면 남북관계의 정상화도 어렵고 대규모 경협을 통한 지원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정부의 교체와 더불어 통일정책 및 그에 따른 통일교육의 지형이 다변화·다양화되고, 통일문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공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설적이지만 자유민주주의의 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통일교육에서 이데올로기적인 요소가 점차 줄어들었으며, 과거 획일적인 교육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추세 속에서도 통일교육이 여전히 무조건적 '당위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즉 반공의 당위성이 통일의 당위성으로만 바뀌었을 뿐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기존의 '반공지상주의'에서 '통일지상주의'로 변했을 뿐 한 가지 관점을 절대화하고 정부와 국민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인 논리를 전달하는 식의 교육이라는 점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이견이나 대안적 논의의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전혀 '교육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으며, '통일' 그 자체를 지나치게 전면에 내세우려고 했을 뿐, 사실상 통일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평화, 민주주의, 관용, 존중, 차이에 대한 이해 등과 같은 가치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추병완은 이러한 경향이 통일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한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기 보다는 감정에의 호소와 설득에 주로 의존하는 감상주의, 실제 사람들의 삶의 세계와는 거리가 있는 민족사적, 정치경제적 당위성만으로 통일의 필요성을 논하는 추상주의와 연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sup>6)</sup> 통일지상주의나 감상주의, 추상주의는 한편으로는 과거의 반공중심

5) 송정호, "통일정책과 시민참여 현황," 「시민사회와 NGO」, Vol. 3, No. 1,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05, p. 167.

6) 추병완, "학교 통일교육의 평화교육적 접근," 인문사회교육연구, 제6권(춘천교육대학교, 2003), p. 93.

적 통일교육에 대한 철저한 성찰 없는 반작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다.<sup>7)</sup> 그리고 여전히 통일교육의 대부분이 감정적이며, 현실적이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에 대한 불신만 심화시킨다는 점, 통일의 당위성만 강조하거나 민족 동질성 회복의 중요성을 맹목적으로 부각하면서 시대적 요구에 따라가는 현상추수적인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정부의 홍보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그쳤다는 점, 사회 전반적인 이데올로기를 통합하지 못하고 교육에 있어서도 뚜렷한 소신 없이 구태의연한 사실전달이나 개념설명 방식으로 교육하고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sup>8)</sup>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어떤 정권도 통일정책결정과정에서 국민과 사전적 논의 없이 선언적 형식으로 일방적 결정을 발표한다는 점이다. 김대중 정부의 6.15공동선언 2항<sup>9)</sup>을 중심으로 다양한 해석을 낳게 하였으며, 이것이 남남갈등을 일으키는 단초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2010년 8.15기념사에서 제시한 통일세 제안 및 3대공동체론도 남한 내부에서도 너무 성급한 제안이었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으며 곧바로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였다. 이처럼 통일정책이나 통일교육을 포함한 통일담론이 정부주도의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집행되는 경향이 있어서 남남갈등, 남북갈등을 증충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교육환경이 바뀌면 교과내용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정권이 변화할 때마다 통일교육의 방향과 그에 따른 「통일교육치침서」의 수정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교육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이 아닌 정책홍보나 교화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sup>10)</sup> 통일교육도 통일국가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목표물이다. 과거와 같이, 국가가 만들어낸 공식적 이데올로기로 통일교육을 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새로운 남북관계가 통일교육에 주는 교훈은, 통일국가의 형태에 대해 그것을 구성해가는 방법, 즉 협상에 의한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통일교육에서 강조하는 ‘중립’, ‘균형’, ‘객관’이 안고 있는 국가주도성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남북한 상호 간, 각자 신념화된 기호체계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있는 그대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균형있게 시민에게 알린다는 입장은 사회과학적 오류이다. 북한 관련 연구자와 대학생들이 북한에 대한 연구과정에서 심각한

7) 조정아, 앞의 글, 2007, p. 286.

8) 고병현, “통일을 만드는 평화교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자료, <http://www.kerc.or.kr>에서 인용.

9) 2000년 6월 15일 합의된 6.15선언의 2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10) 송정호·조정아, “이명박 정부의 통일교육정책과 통일교육 거버넌스의 개선방향,” 『평화학연구』, 제10권 제1호(2009), 한국평화연구학회, p. 179.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정보의 부족, 접근제한성, 일부 기관에서의 독점현상이 여전하고, 북한 사회나 문화에 대한 정보를 한정적인 시각에서, 수동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상황에서<sup>11)</sup> 객관은 성립할 수 없다. 북한에 대한 정보 생산의 경험도 없고, 그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한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광범위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정보 부족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정보관리자의 공개의지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통일 논의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가능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우리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sup>12)</sup>의 세 가지 원칙 중 “강압과 교조화금지 조항”을 참고하여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종래의 독점적 일방적 정보관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통일교육이 지속된다면 북한과 북한사람에 대한 인식을 분단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남한과 북한 사이의 차이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지, 이후 예상되는 사회 변화에 대한 각 부문별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를 준비하는데 실패할 것이다.<sup>13)</sup>

## 2. 정치교육과 대학통일교육의 부재

학교교육은 사회화이자 정치사회화의 과정이기에 정치교육이다. 인간의 사고방식은 그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이나 기관으로부터, 무엇을 보고 듣고 배우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화란 개인이 자기가 속해 있는 문화의 사회적 양식과 가치를 배워나가는 것이며, 이것이 곧 교육본질이다. 정치교육은 정치공동체가 안정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이다. 민주주의는 정치교육을 통한 꾸준한 민주화의 노력으로 완성된다.

그러나 우리는 권위주의적 정권과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상당히 왜곡된 역사적 경험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정치교육의 본래적 의미와 내용을 사회화의 입장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에 관하여 부정적 이미지가 잔존해 있기에 특히 통일교육에 대해서도 능동성과 참여의 정도가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결여되고 생략되었던 것은 진정한 의미의 정치교육이다. 정치교육은 개개인이 그가 속한 공동체 규범 속에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창조하고 지속시키는 의식적인 작업이다.

11) 한국인들이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은 창구 자체가 신문, 방송이 82.6%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절대적이다.

12) Bundeszentral für politische Bildung, 2003. Jahresbericht 2002/2003. Bonn.

13) 고병현, “통일을 만드는 평화교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자료, <http://www.kcrc.or.kr>에서 인용.

민주시민교육 역시 정치교육의 일환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체제의 효율성 제고 및 정당성의 확보, 사회적 통합기능담당, 민주적 정치발전을 위한 민주시민의 양성 기능이라는 점에서 강조된다. 민주시민교육의 당위성은 민주주의 자체에서도 출된다. 어떠한 전통을 갖는 민주주의라도 보편적이고 상호작용하는 민주주의적 이상을 교육하는데 실패한다면, 그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적이고, 인도적 가치들인 인간의 존엄성, 정의, 자유, 합법성, 평등, 그리고 이것들을 지키려는 정신은 꾸준히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탈냉전의 흐름에 조응하여, 북한을 함께 살게 될 타자(他者)로 인식하는 시각의 형성도 꾸준히 개발되어야 할 접근법이요 관점이다. 이러한 시각은 적과 동포의 이분법을 넘어 통일과 북한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안목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통일은 결국 분단이후 현재까지 다른 경로의 사회발전을 이룩해 온 사회간의 통합의 문제이고, 다른 것과의 공존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오해와 편견,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때 공존해야 할 두 사회의 차이가 단지 '다름'이 아니라, 권력의 차등을 내포하는 '불평등'을 전제로 할 때, 이러한 교육은 갈등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점에서 더욱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 사이의 통일문제를 타자와의 평화적 공존으로 환치시킬 때, 통일교육에는 한반도의 시공적 제한을 넘어 세계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사한 가치교육 프로그램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최근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부상하고 있는 '문화이해지'(culture assimilator)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sup>14)</sup> 미국에서 발전된 다문화이해교육(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이나 유럽의 평화교육과 갈등해결교육 등도 남북한 사회통합과 그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의 비폭력적 해결을 위해 활용 가능한 교육 형태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sup>15)</sup>

따라서 통일교육은 엄밀한 의미에서 정치교육의 일환이다. 통일교육은 “분단국가를 통일시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국민들에게 확산시키고

14) 문화이해지(cultural assimilation)는 사회심리학의 영역에서 다른 문화 간의 접변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의 적응과 문화적 훈련을 위해 연구되었다. 문화 이해지를 통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정진경(2000) 참조.

15) 다문화이해교육은 종래의 미국의 통합정책인 용광로(Melting Pot)정책이 허구적 신화이며 주류 백인 문화에 의한 상징적 폭력이라고 비판하고, 오히려 다인종사회를 평화롭고 풍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재료가 자신의 맛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샐러드(Tossed Salad)와 같은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문화와 공존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의 교육프로그램의 근본적인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Banks(1991a; 1991b); Hernandez(2001) 참조. 갈등해결교육은 갈등은 어느 사회나 존재하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으로 파악하고,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개입, 협상, 중재, 대화, 비폭력적 저항, 의사소통능력의 개선 등등-을 가르치는, 평화교육의 새로운 시도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국내에 갈등해결교육을 본격적으로 소개한 사회단체로, 이 집단에 의해 통일교육에 갈등해결교육을 접목시키려고 하는 새로운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갈등해결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갈등해결전문가훈련 프로그램 참가자 편 (2001); 정현백 외(2001) 참조.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통일대비교육”<sup>16)</sup>인 동시에 “통일 이후 주민들에게 새로운 생활방식과 가치관을 정립시켜 공동체 의식을 조성하는 통일완수교육”이기도 하다. 통일교육은 통일 이전 상황에서 수립되어 통일과정을 주도하면서, 최종적으로 한 체제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통합의 완성을 지향<sup>17)</sup>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중요한 사회화의 일환이며, 본래적 의미의 정치교육인 통일교육이 여전히 부정적이고 기피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의 결과인지, 아니면 다른 사회구조적 원인에 의한 것인지 정확한 원인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육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현장의 현실을 살펴보면 더욱 암울하다.

초중등학교 통일교육은 교과과정상 통일교육이 윤리나 도덕 교과의 하위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전문성과 교육 방법 및 내용의 재고(再考)가 시급한 실정이다.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일교육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통일교육지침』 등에서 보면 초중등학교 학생, 일반사회인 대상의 사회통일교육, 공무원대상교육 등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대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기존의 통일관련 논문들은 통일교육의 방향, 초중등교육학교, 일반사회인대상 교육에 관심을 집중하였고 실제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에 관한 논문은 별로 없다. 대학통일교육을 주도하는 기관이나 사회교육기관이 없다. 통일부의 대학생 논문현상모집이나 대학 내 통일연구소 중심(통일부 지원)의 연구와 연구지원활동이 고작하다. 통일관련 대학원도 개설되어 있고 북한학과도 개설되어 있지만, 통일 교육과 관련해서는 통일교육원의 교수진 이외의 전임 인력을 찾아보기 힘들고, 통일 교육 논의도 타 학문 분야에서 간헐적으로 제기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sup>18)</sup>

무엇보다도 대학 통일교육은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충분치 않다. 전국의 대학교 가운데 절반 이상의 대학에서 북한 및 통일 관련 강의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sup>19)</sup> 더욱이 관련 강좌를 개설한 대학의 경우에도 통일교육 전문가가 아닌 담당자가 실시하는 체계에 교양선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 북한과 통일문제에 대해 접할 수 있는 학생 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16) 정용길, “동서독 정치교육의 비교,” 『분단국 통일론』(서울: 고려원, 1989), pp. 86, 90~91 참조.

17) 이규영, “독일의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국제지역연구』, 제9권 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05, p. 161.

18) 호남대학교의 경우 전체 7,000여명의 재학생 중 통일과 관련한 강좌는 65명이 수강하는 일반선택인 〈북한학〉이 유일하다. 조선대학교의 경우 재학생 20,000여명인데 통일관련 강좌가 총 5개가 설강되어 있다.

19) 변종현, “대학 통일교육의 역설과 활성화 방안,” 『윤리연구』, 제78호, 한국윤리학회, 2010, p. 308.

그런 가운데 대학통일교육의 문제점은 대학과 대학생들이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통일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요즘의 대학생들이 공공의 문제나 국가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관심이 적다는 이유와 증첩적으로 작용하여 대학통일교육의 부재 내지 형해화가 지적되고 있다. 대학생들이 공동체나 역사에 대한 인식이 보다 더 지엽적인 이익에 전도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게 유도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교수-학생간의 관계에서 대학생들의 무지 무관심도 문제이지만 관련 교수들의 무관심과 이기심과 물질주의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교수로서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대북정책에 대한 수동적 지지나 맹목적 비판 속에서 남북한 문제와 통일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부족했고, 그나마도 정부나 산하기관의 재정적 지원하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대학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대학이 지닌 본연의 연구기능을 회복함으로써 통일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풍부한 교육적 자양분을 공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학의 연구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학문적 연구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때 대학 통일교육의 기반이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Ⅲ. 통일환경의 변화와 대학사회

통일정책의 환경이란 통일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전반의 정책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적인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환경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정책 환경에 대한 고찰은 정치문화와 사회경제적 조건에 집중되어있다.<sup>20)</sup> 남북한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곧 통일의 주체세력이 될 1990년대 이후 한국대학의 변모를 연결시켜 검토해 봄으로써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동북아환경의 변화

분단 상태가 60여년 이상 지나면서 북한과 한국만이 변한 것이 아니라 이를 둘러싼 한반도의 정치경제적 상황도 많이 변화였다. 유럽은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질서가 해소되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면서 국가 간의 관계는 갈등과 대립보다는 협상과 타협의 방식을 택하고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초월하여 공존공영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럽에서 금세기의 담론은 갈등에서 협력으로 변화를 가져왔고 지역협력이 보편화되었지만, 동북아 질서는 소련의 붕괴, 중국의 극단적 민족주의의 부상 가능성,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과 그

20) 송정호, 앞의 글, 2006, p. 273.

로 인한 급변의 가능성, 일본의 점진적이지만 지속적인 우경화 경향, 러시아의 부상과 이에 대한 주변국들의 불안 등으로 인해 여전히 유동적이며 불안정하다. 특히 동북아시아는 역내 국가인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을 경험한 바 있어서 이에 대한 잠재적 불신이 현저하게 남아 있고, 또한 사회주의 중국의 존재와 한반도의 분단구조 지속으로 인해 여타 지역에 비해 냉전체제의 유제가 강하게 남아 있는 지역이다.

2008년 미국경제의 위기는 미국으로 하여금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힘을 투사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이른바, 도광양晦(韜光養晦)에서 굴기외교(崛起外交)로 노선변화를 모색할 만큼 21세기 세계질서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 미국의 리더십은 중국의 부상으로 많이 약화되었으나, 여전히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을 동맹국으로 두고 중국과 경쟁하면서 자신의 국익을 확보하고 있다. 천안함사건과 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강화된 동해와 서해에서의 군사기동훈련은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를 둘러싼 대리전 양상으로 비춰지고 있다. 한반도가 주변 강대국들 이해관계의 한 가운데에 놓이게 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입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와 같이 동북아는 아직도 냉전의 잔재와 국가 간의 갈등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평화가 위협당하고 있으며 지역협력의 단초조차 마련치 못하고 있다. 특히, 북핵문제는 동북아 지역을 넘어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범세계적인 현안으로 부각되어 있다.

분단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분단체제의 고착화는 심화된다. 무엇보다 남북 간의 경제격차가 급속하게 심화되면서 통일비용이 증가될 거라는 대한민국 국민의 우려가 깊어져 가고 있다. 통일을 상징할 경우, 북한주민이 한국국민의 생활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데 지불되는 통일비용은 남북 간 경제격차 심화와 더불어 더욱 증가할 것이다. 한국인은 실제적인 경제부담을 고려하여 통일에 대한 당위성, 혹은 당장의 통일의 필요성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가능성이 더 크다.<sup>21)</sup>

향후 동북아는 미국 패권의 지속, 미중 양극 협력 혹은 경쟁 체제, 다극체제, 다자협력 체제 중 하나의 모습을 띠게 될 확률이 높다. 그러나 어떠한 체제가 도래할 지에 대해서 쉽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이 미래에 어떠한 가능성을 가지게 될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변화하는 국제정치를 최대한 예측하고, 각각의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며, 통일을 고려한 한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함께 세워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향후 미중 간의 양극적 경쟁체제가 본격화되고, 남과 북이 냉전기와 같이 미국과 중국의 양대 진영에 각각 포함될 경우, 통일의 국제적 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반면 한반도의 평화구조 정착과정에서 한반도를 둘러

21) 전재성, “통일 환경의 변화와 통일논의의 필요성,” 21세기 한반도 정세 변화와 통일의 비전, 통일 및 대북정책 학술회의(통일연구원, 2009), p. 6.

싼 외교환경이 진화하고, 강대국들 간의 다자협력이 더 증가되도록 한국이 노력한다면 한반도의 통일과 동북아의 통합이 선순환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 것이다.<sup>22)</sup>

통일은 분단된 국가들이 뭉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분단 상태의 '현상 타파'를 전제한다.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세력의 분포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현상유지와 그러한 세력의 분포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현상타파는 상호 대립·배치되는 개념이다.<sup>23)</sup>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정세는 현상유지와 현상을 타파하려는 세력 간의 각축장이다. 더불어 국내에서도 드러내지 않지만 잠재적으로 분단이 촉박이자 그들에게 이익이 전유되거나 향유되는 세력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력들의 반발에도 역설적으로 이들에게도 '분단의 타파'가 유익하다는 것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면에서의 공동체 논의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문학계를 중심으로 시작된 동아시아공동체론이나, 경제교류를 목적으로 한 아세안+3(한·중·일)의 APT, 한류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 진출 등 다양한 우호적·평화적 접근 등이 있다.

## 2. 한국사회의 변화: 신자유주의와 한국대학 그리고 대학생

### 1) 신자유주의와 한국

신자유주의는 시장에 대한 무한한 믿음을 전제로 시장이 경제문제 뿐아니라 거의 모든 사회문제에서도 최선의 대안이라는 시장만능주의 혹은 시장근본주의 이데올로기의 현대적 형태라 할 수 있다. 세계자본주의가 50, 60년대의 호황을 맞은 후 70년대부터 점차 자본주의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투자이익율이 점차 떨어졌다. 이것이 70년대에 두 차례의 석유위기로 인해 더 심각해지면서 경제성장이 더 어렵게 되고 분배도 쉽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제 사회적 요구 대신 시장의 자유경쟁 원리가 중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980년 초, 영국의 대처리즘과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를 통해 등장한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을 국가의 역할이 축소된 공간을 메워줄 존재로 제시한다. 이들은 국가는 실패할 수 있지만 시장은 실패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시장은 결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주요 정책 아젠다는 규제완화와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국가의 경제적 역할을 축소하는 것과 거시정책에서 인플레이 통제를 우선시하는 통화정책과 건전재정주의를 내세운 재정정책 그리고 복지 및 노동보호정책을 축소함으로써 경제규율을 강화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사회적 다윈주의와 마찬가지로 경쟁을 중시한다. 사회적 다윈주의는 인간 사회를 투쟁과 갈등으로 보고 있다. 기업의 경제논리로 사회의 다른 영역들을 운용하고자

22) 위의 글, p. 7.

23)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New York: ALFRED·A·KNOPF, 5th edition, 1973), pp. 40~44.

하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다윈류의 사회적 진화론이 교묘하게 이데올로기처럼 이용된다.

신자유주의는 시장근본주의와 보수주의의 결합으로, 시장이 개인들의 능력과 창의성에 따른 경쟁을 촉진하고 이에 따라 개인들의 능력을 차별화하고 보상함으로써 사회전체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신념의 이론체계이다. 따라서 국가는 자유시장을 위해서 사유재산권 보호, 공정경쟁의 보장, 시장체제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뿐, 그 밖의 국가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살아남을 능력이 되는 것만 살아남는 사회로서 끊임없이 경쟁해야만 하는 무한경쟁사회가 되고 말았다.

대학의 위기를 가져오는 요소는 신자유주의적 경쟁논리의 확산이다. 시장과 경쟁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 하려는 논리가 큰 힘을 얻게 되면서 대학 안팎에서도 경쟁논리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경쟁을 기초로 한 교육에서의 효율성 강조와 교육의 시장화에 기초하고 있다. 경제 논리를 교육에 적용시킴으로써 교육의 효율성과 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 2) 신자유주의와 기업화된 대학

현대 사회에서 대학이 더 이상 상아탑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생산성, 효율성, 책무성 등에 근거하여 평가받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장기제들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인적자원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대학에 대한 국가, 사회, 학생으로부터의 개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대학 내의 조직 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국가, 지역, 기관, 학과 수준에서 고등교육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변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정부와 관련 기구, 대학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양한 변화들이 요구되고 있다.<sup>24)</sup> 교수들의 연구나 교육도 무한경쟁의 시스템 속에서만 더욱 발전하고 효율적일 것이라는 가정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 대학 간에도 무한경쟁의 시대가 도래하고 기업처럼 홍보 전략을 중시하는 시대가 되었다.

한국사회에서 대학운영의 기준이 되는 것은 더 이상 대학의 이념이나 학문적 가치가 아니라, 수익성과 효율성을 앞세운 시장논리와 경영기법이다. '선택과 집중', '효율성', '경쟁력', '수익성', '경영총장', '매칭 펀드', '전략적 기획' 등 시장의 언어들이 대학담론을 주도하면서 '형평성', '자유', '평등', '연대', '정의', '학문총장', '민주적 공동결정' 등 대학 고유의 가치들은 낡고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폐기되고 있다. 게다가 대학에 기업식 경영기법이 도입되면서, 대학의 모든 결정이 시장의 원리와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대학의 발전계획은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영컨설팅 회사에 의해 수립되고, 교수의 임용은 헤드헌팅업체의 평가에 따라 좌우되며, 학과와 교과과목의 폐제도 경영적 관점에서 결정되고 있다. 나아가 시장논리로 무장한 언론기관이 대학평가를 주도하게 됨에 따라 대학은

24) 한국교육개발연구원, 「고등교육 보편화에 따른 고등교육 재구조화 및 질 제고 방안」, 교육인적자원부, 2003, p. 1.

더욱더 시장의 기준에 종속되고 있다.<sup>25)</sup>

대학이 시장 논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기업화 현상은 한국의 경우 대학의 이윤 추구 활동과 대학 캠퍼스의 상업화라는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난다. 대학의 이윤 추구 활동은 정부가 먼저 대학 기업화를 유도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2008년 2월20일 국무회의에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학교기업 사업금지> 업종을 102개에서 19개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다. 대학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 20%를 돈이 아니라 기술로 투자한다. 기술거래소, 기술보증기금, 산업은행 등 3개 기관에서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평가하면 대학은 해당 기관이 인정하는 액수만큼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대학은 자회사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 배당이익을 챙길 수 있고, 자회사가 상장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되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2009년 현재 강원대, 경희대, 고려대, 삼육대, 서강대, 서울대, 한양대 등 7개 대학이 대학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2008년 10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대학자율화 2단계' 방안은 이러한 이윤 추구 활동의 범위를 더욱 넓혔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학교법인 재산의 처분이 사전신고제에서 사후보고제로 변경되면서 대학의 재산 처분이 쉬워졌다. 기준액도 3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대학이 10억원 이내 범위에서 법인 재산을 맘대로 처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sup>26)</sup>

김누리 교수에 의하면 “한국 사회에서 대학과 관련된 논의는 모두 시장이란 프레임에 갇혔다. 시장이 사회를 지배하는 프레임으로 자리 잡으면서 대학을 상품으로 여기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 그러나 대학이 시장 논리를 따르는 건 대학의 자기 부정이다.”<sup>27)</sup> 이는 대학의 정신적인 산물의 보루가 아니라 물질적인 가치를 생산해내는 공장 내지 전진기지라는 것이다.

대학 기업화의 양상은 크게 네 가지 국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대학이 기업처럼 수익과 영리를 위해 교육과 연구를 판매하는 현상(대학의 상업화)이고, 둘째는 대학이 점점 더 기업의 경영기법과 지배구조를 수용하는 경향(기업식 대학경영)이며, 셋째는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대학에 대한 지배력과 영향력을 확장하는 현상(기업의 대학지배)이고, 넷째는 대학에서 기업문화가 지배적인 문화로서 창궐하는 현상(기업문화의 창궐)이다.

한국대학에서 기업식 지배시스템은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교수와 학생의 자유롭고 평등한 학문공동체'라는 대학의 이념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25) 김누리, 주식회사 유니버시티-대학의 기업화와 학문공동체의 위기, 안과밖, 2009; 고부응, “한국의 대학과 미국: 미국대학과 한국대학의 기업화,” 한국의 대학과 세계, 중앙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한독문화연구소 2009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9.

26) 김누리, 앞의 글.

27) 위의 글.

다. 기업식 지배구조가 정착되면서 대학은 효율성을 얻은 대가로 영혼을 잃어버린 기관이 되었다.

시장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는 미국대학과는 달리, 유럽의 대학은 시장으로부터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다. 단순화시켜 말하면, 미국의 '기업화된 대학'이 자유시장경제의 교육적 반영이라면, 유럽의 '사회화된 대학'은 사회적 시장경제의 교육적 산물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경우처럼 기업과 시장이 대학을 완전히 지배하는 수준의 대학 기업화는 세계적 차원에서 보면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라기보다는 오히려 미국 및 미국식 교육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몇몇 국가들에서만 볼 수 있는 예외적인 현상이다. 한국에서 대학의 기업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한국사회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철저하게 미국사회의 축소판이기 때문이다. 한국대학이 "전 세계의 대학을 통틀어 볼 때 아주 비정상적인 대학운영 방식"<sup>28)</sup>을 갖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미국대학의 기형적 발전과정을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이것에 의해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세력, 그 중에서도 신자유주의 교육에 대항하는 교육운동진영에서는 '인간화 교육'에 주목해 왔다.<sup>29)</sup> 민족교육은 분단이라는 특수성에 기반한 것이고, 민주교육은 독재와 재민주화 과정에서 제시된 원칙이다. 이와는 달리 인간화교육은 신자유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빛을 더한다. 최근 사회변혁과 교육운동이 함께 가지 않으면 교육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 3) 객체(상품)로 전락한 대학생과 통일의식

2007년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41.7%가 6·25를 북한의 남침이라고 대답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sup>30)</sup> 또한 대학생 10명중 1명 이상이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생 12%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sup>31)</sup>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단편적인 여론조사이지만 대학인들의 위치와 현재성을 드러내고 있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교육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접근은 교육에서의 성과주의와 무한경쟁만을 강조할 뿐이며 인간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원론적 교육목적에 대한 경시를 가져왔다. 이는 개인의 사회적 연대감을 훼손시킴으로써 윤리적, 도덕적 파탄을 가져오며 각종 사회문제를 양

28) 고부응, 앞의 글.

29) 문용린, "학교통일교육의 새로운 전개방향: 교사를 위한 참고자료," 한국교육개발원 도덕교육연구실, 1998.

30) 조선일보, 2007년 6월 25일자.

31) 한국대학신문, 2007년 한국대학생의식조사. 이 영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황에 따라 속도를 조절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52.8%로 가장 많았지만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10.8%)', '절대 통일이 되어서는 안된다(1.3%)'는 의견이 12%대에 달했다.

산하게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교육은 인간을 고유한 인격체가 아니라 집단의 한 부분으로만 파악하며, 개성적 존재가 아닌 획일적이며 경쟁적 존재로만 인식 할 뿐이다. 그러므로 인간 자체를 어떠한 시각으로 보는가 하는 문제는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개방적이면서도 이익지향사회에 적응성을 드러내는 민주화 이후 세대들은 사회문제에 대한 문제제기 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설령 문제의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기도 힘들다. 대학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대학인은 끝없는 스펙 쌓기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상대평가로 이루어지는 강의, 교수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강의,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는 힘들게 하는 것의 일부에 불과하다. 대학에서 학습한 교육과정은 기업들이 필요한 것과 불일치하며 업무수행능력보다는 영어구사능력이 그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들을 지배하는 구조를 변경시키거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개조하려는 문제해결방식에서 한참 멀리 있다.

좋은 학점을 받아야 취직에 유리하니 대학마다 좋은 학점 주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A, B학점이 전체의 70~75%를 차지하고 있다. 성적에 변별력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쉬운 과목만 찾아다닌다. 또 전공 공부는 제쳐놓고 영어책이나 공무원수험서만 끼고 산다.

한국 대학에서 국제화, 특성화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 특성화에 성공한 대학은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 대학은 고시, 취업 준비생의 공부방으로 전락했다. 자신들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대학생활을 하기 보다는 취업에 유리한 영역을 선택해서 강의를 듣고 실용적인 과목만을 수강하기 때문에 어떠한 국가나 가장 기초적인 학문인 '인문학'과 '자연과학' 등의 기초학문이 한국에서는 설 땅이 없다. 한국은 OECD선진국 중에서 다른 나라의 역사나 전통 혹은 경제나 의식구조에 대해 연구하는 지역학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우석훈은 이러한 한국 사회과학의 특징의 하나로 인류학의 부재를 실례로 제시한다. 인류학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함께 '자신에 대한 성찰,' 이라는 두 가지 방향을 모두 가진 독특한 학문<sup>32)</sup>이라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인류학은 독립된 분과로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서울대학교를 제외하면 이 학문을 독립된 학과로 가지고 있는 대학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

오늘의 한국사회는 취업불안, 고용불안, 노후불안으로 대표되는 '불안공포 증폭사회 증후군'<sup>33)</sup>을 앓고 있다. 개인은 생식본능조차 거세되는 삶을 살아야하고, 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늪에 빠지게 된다. 신자유주의적인 삶이 한국 대학생들을 극도의 불안정성에 노출시키면서 자아의 성찰에 기회를 앗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들에게 통일론과 통일교육은 연목구어(緣木求魚)라 할 것이다.

32) 우석훈, 『촌놈들의 제국주의』(서울: 개마고원, 2008), pp.53-54.

33) 김태형, 『불안증폭사회』(서울: 위즈덤하우스, 2010)을 참고할 것.



### 3. 북한사회의 변화

1994년 7월 김일성의 돌연한 사망과 함께 등장한 김정일 시대는 ‘국가의 실패’에다 자연 재해까지 겹쳐 엄청난 아사자와 대량탈북 사태 속에서 출발했다. 그 후 김정일은 피폐해진 경제와 만성적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군사제일주의 노선인 ‘선군정치’에 입각하여 핵과 미사일 개발로 통치의 기반을 닦았다.

1993년부터 시작된 북핵문제는 한반도 문제의 키워드처럼 간주되고 있다. 또한 2005년 2월 10일 북한의 핵보유 선언은 미국의 강경한 대북정책에 대한 반응임과 동시에 체제유지를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남북관계는 매우 악화되어 있고, 북핵문제의 해결은 더욱 요원한 상황이다. 한국 내부에서도 북핵문제의 미래와, 북한 문제의 향후 방향,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 거버넌스(governance)의 일관된 연속성에 관해 논의가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보여진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목표와 핵무기를 협상카드로 사용하려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에 의해 사실상의 핵무기보유국가가 됨으로써 핵협상론의 근거가 약화되기는 하였지만, 북한이 핵보유국가로 공인되기 전까지 그리고 핵협상이 지속되는 한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그동안 10여년에 걸친 시장화의 진전에 따라 신흥 상인계층의 성장, 농민층의 자립기반 확대, 권력기관의 구조적·체계적 부패, 국가자산의 횡령·은닉 등의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체제 밖에서 자생적 경제기반을 확립한 시장친화적 세력이 성장해온 과정이자, ‘안으로부터’ 체제 자체가 해체·와해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일 시대의 후반기는 체제 차원에서는 ‘시장과의 전쟁’이, 주민생활 수준에서는 ‘장바구니와 완장(보안경찰)’과의 대립이 일상화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sup>34)</sup>

2009년 말 북한 당국은 화폐개혁을 통해 통제경제체제의 복구를 시도하였다. 화폐개혁은 더 이상 심각한 수준의 시장화와 체제해체를 방지할 수 없다는 상황 판단에서 단행된 조치였다. 또한 이 조치는 후계자 구축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광범한 시장 세력과 그와 결탁하거나 연계된 반사회주의 세력의 물질적 기반을 와해시켜 후계자체제의 토대를 굳히겠다는 시도였다. 그러나 시장 세력과 상인을 겨냥한 시도였으나 외화나 권력을 갖지 못한 일반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다.

2010년 새해를 넘기자 엄청난 인플레이와 식량 부족 등으로 대부분의 주민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면서 북한 당국조차 당혹감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김정은 3대 세습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경제문제 해결이 선결과제인데, 현재의 북한 경제사

34) 조민, “한반도 정세와 통일 전망,” 포럼 [오늘], 2010. 04. 22을 참고할 것.

정상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화폐개혁 이후 국가 공급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경제난 가중, 주민들의 불만 고조 등 사회 경제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자본수혈 없이는 북한경제는 더 이상 지탱하기 곤란한 상황이며, 식량 및 전기와 자원 부족으로 경제회생의 돌파구를 찾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온 위기상황에서도 유지되어온 북한체제의 내구력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특권층과 통치엘리트들은 체제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김정일 수령통치 이외의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북한 통치 엘리트층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오히려 체제결속력을 높여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고 통일의 길에 합류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출구'와 함께 대안제시가 필요하다.<sup>35)</sup>

북한정권은 통일정책에 있어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를 줄곧 주장해왔지만, 6.15선언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합의하면서 과도단계로서 하나의 민족, 두 개의 국가에 준하는 남북 양 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하는 방식으로 선회하는데 합의하였다고 본다.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남북 양 정부에 현존의 권한과 기능을 그대로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라는 남한의 '국가연합제'안과 맥을 같이한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잠정적인 조치로서 현실적인 의미"를 갖는다.<sup>36)</sup> 북한의 이러한 변화는 90년대 후반의 극심한 식량난과 이미 상당히 벌어진 남북한의 격차 앞에서 흡수만은 피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02년에 「노동신문」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연방제로 가는 잠정적인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본질적으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실현되는 초보적인 통일의 단계로 스스로 승인하고 있다.

#### IV. 새로운 통일교육체제로의 전환

이제 한국사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다가서고 있다. 통치가 구성원들을 억압하고 배제시켰던 모습에서 참여민주주의와 질적인 민주주의를 위한 '합의'와 '협'이라는 갈등처리를 배우고 있다. 분단은 누구에게는 축복일수도 있지만 대다수 구성원에게는 고통이자 불행이다. 작금의 북핵문제해결도 최종적으로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전망을 구축하여 우리의 행복과 자유 그리고 평등과 인권 그리고 선을 극대화시키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 필자는 다음과 같이 우리들의 존재와 관계방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통일교육체계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몇 가지 프레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35) 박상익,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국면과 과제," 『평화학연구』 제11권 4호(2010), pp.217-219 참조.

36) 장석, 『김정일장군 조국통일론 연구』(평양, 평양출판사, 2002), pp. 389~90.

## 1. 신뢰와 소통의 구축

한국사회는 신뢰과 소통의 장애상태이다. 공존과 소통, 그리고 상호성이 원칙만이 한국사회를 강하게 해 줄 수 있다. 신뢰(trust)는 가장 중요한 사회자본이다. 이는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심리적 상태가 결여되거나 발현되지 않는 상태를 지적하는 것이다. 한국인의 경쟁심리와 오랜 정치적 갈등의 산물로써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일단 불신하게 되는 사회구조가 생성되어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대북관계에서도 나타나듯이 먼저 의심과 편견을 통해서 상대방을 격리시키고 분리시키는 전략중의 하나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신뢰의 가치는 타인을 신뢰할 수 있게 되면 상호호혜(mutual benefits)와 협력이 촉진되어 공동체의 발전이 가능하게 하는 기여에서 증명된다. 신뢰는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고, 경제성장도, 사회적 복지도, 건전한 정치공동체도 가능하게 하는 자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왜 그런가? 신뢰는 민주주의 운용에 필요한 시민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국가와 시민사회를 연결시키는 접합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시민참여 내지는 시민참여(civic engagement)의 네트워크와 규범이 강조되어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정부는 효율적이 되며, 효율적인 정부는 경제적 성공을 가능케 하는 거래비용의 감소를 보장하기 때문이다.<sup>37)</sup>

후쿠야마(F. Fukuyama)와 퍼트남(R. D. Putnam)은 국가의 복지든 그것을 발전시키는 국가의 능력이든, 그것은 사회에 내재한 신뢰의 수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신뢰는 콜만이 주장하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으로, 사회적 자본은 집단이나 조직에서 그 구성원이 공동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sup>38)</sup> 신뢰관계가 제작해내는 사회적 자본은 “자발적 사회성”(spontaneous sociality)으로 사회적 연대와 자발적으로 연합을 형성케 한다. 미국, 독일, 일본에는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데 비해 대만, 이탈리아, 프랑스, 한국은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적다.

단순한 정신문명뿐만 아니라 물질문명이 지배하는 융합문명에서는 소통합리성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존재와 존재의 변화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특정한 실체를 고정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맹적 합리성”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소통합리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융합문명기에는 단순한 구래의 소통합리성만으로는 부족한 새로운 관계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단순히 접촉하고 대화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통한 인지적, 정서적 연대의 필요성을 함축하는 것이다. 감정적·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융합적 포섭을 실현하고, 차이와 다양성이 공존하는 생활 속에서 유대를 만들어내 사회적

37) 김인영, “한국사회와 신뢰: 후쿠야마와 퍼트남의 논의의 재검토,” 『아시아지역연구논총』, 2집, 1호, 한국세계지역학회, 2008, p. 7.

38) James S. Coleman, “Social Capital in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upplement(1988).

잉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증여적 인간을 단위로 하여 거버넌스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두 가지 해결책의 조화는 동맹적 합리성의 구축을 통해 가능하다.

융합사회의 단절에 대한 우려는 혈연이나 지연을 중심으로 한 원초적 공동체의 와해에 동반한 개인화 현상과 함께 고조되고 있다. 즉, 원초적 공동체 중심의 전통사회가 개인들 간의 소통이 삶의 의미를 좌우하게 되는 상태로 변모함에 따라 커지고 있다. 때문에 융합사회에서 소통을 매개하는 미디어의 중요성은 대단히 크다. 다시 말해 미디어를 매개로 하는 의사소통은 융합사회에서의 사회활동, 사회관계, 사회구조 및 사회적 에토스에 이르는 사회적 성격을 좌우하는 요체로 대두된다. 따라서 융합사회에서 발생하는 잉여의 문제 및 불균형 문제는 “동맹적 합리성”이라는 새로운 합리성 논리에 의해 접근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명박정부 초기를 지배했던 담론 중의 하나인 소통(疏通, communication)은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특징이다. 소통에는 힘의 역관계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대칭적인 힘의 관계보다 비대칭적인 힘의 관계가 일상적인 현상이고 보면, 이해를 향한 움직임에는 수순이 있어야 한다. 통합·소통이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데는 보수든 진보든 동의한다. 역시 힘 가진 사람이 손을 내밀고 무언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어떻게 화해하고 통합하겠다는 것인지 정부가 먼저 답을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통합·소통은 정부가 맡은 가장 중요한 직무고, 정부는 그것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다. 무릇 한 사회에서 소통이 절실한 쪽은 사회경제적 약자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통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강자의 문제이자 강자의 책임이다.

한국정치의 특수성을 잉태했던 분단구조는 소통의 부재, 신뢰의 부재, 권위의 부재, 연대의 부재를 동반하기 마련이다. 사회통합의 통로가 막혀있는 셈이다. 이러하기에 갈등의 유형도 다양하고 일상화되어 있으며 동시에 구조화되면서 전방위적 복합 양상을 보인다. 사회통합은 물질적 이해의 조정뿐만 아니라 가치규범의 조율을 내포한다. 물질적 측면에서 사회통합의 목표는 경제적 풍요이며 가치규범적 측면에서 사회통합의 목표는 사회적 관용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갖는 가장 고통스럽지만 수용해야 할 과제가 신뢰와 소통구조일 것이다. 소통을 전제로 하는 것이 통합이다. 통합을 향한 노력이 장애에 부딪쳐 이제 끝났다는 말이 나온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고 통합의 움직임이 실제로 중단된 적도 있었다. 이러한 장애를 극복해야만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

통일의 대상인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이나 긍정(근본적 종북주의와 반복주의)을 지양하고 북한이 처해있는 대내외적 환경과 북한의 구체적 실상에 근거하여 북한과의 소통과 신뢰를 구축하는 것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 북한 체제의 단편적 이해가 아닌 북한 사회의 전반적인 측면과 북한내부의 특수성을 이해, 해석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보편적 가치기준에 비추어 북한의 실상을 비판적으로 재해석 재구성해야 한다.

## 2. 계몽이 아닌 “토론과 숙의” 시스템

과거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합리화될 수 있다”라는 획일주의적이고 군사문화적 경향이 많았었고, 통일문제와 관련해서도 분단으로 인한 고통과 폐해를 극복하여 보다 인간적인 삶을 추구하자는 차원에서 보기 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희생되더라도 부국강병을 실현하기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등장했다. 더불어 통일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없는 문제라는 점에서 통일의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상호협력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간과할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면서 진정 통일의 주체이자 논의의 대상이었던 국민을 배제시키고 통일논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시민은 논의의 상대가 아닌 교육내지 계몽의 대상이었다.

1987년 민주화, 그리고 1989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에는 민주주의의 확산으로 개인의 자각이 현격하게 증가되었고, 또한 신자유주의에 의한 시장화로 인해서 모든 영역에 대한 시장논리와 이윤법칙이 작동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이 통일에 대한 ‘당위’, ‘필요성’ 등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는 매우 약하고, 이런 점에서 기존의 통일 교육의 문제점을 젊은 세대에서 압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맞는 분석일 것이다. 기성세대는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할 수 없지만, 젊은 세대는 통일을 ‘왜’ 해야 하는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당위’와 ‘현실’ 사이에 간극에서 젊은 세대의 경우는 통일 자체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민족사적 책무를 ‘계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한다. ‘젊은 세대가 통일의 주역’이라는 식의 단언, 그렇지만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계몽’ 프로젝트의 효과는 현실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당위성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트 시민사회는 엘리트에 의해 기획되거나 계몽되지 않고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만들어간다. 즉 이러한 ‘시민’은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는 명목적 자유인에 불과한 대중(mass)과는 달리 심사숙고하고 관여하며 공유하고 기여하는 사람들을 말한다.<sup>39)</sup> 주어진 참여 환경의 변화 속에서 투표하지 않는 ‘무관심한’ 시민, 정부와 정치로부터 소외된 ‘무기력한’ 시민 그리고 정치인과 이익집단, 언론으로부터 ‘제자리를 상실한’ 시민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의 구속에서 벗어난 ‘자주적인’ 시민, 정부와 정치에 거침없이 ‘비판적인’ 시민, 선거 이외의 새로운 참여의 대안을 찾아 활동하는 ‘자발적이며 참여적인’ 시민이 되고자 한다.<sup>40)</sup>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시민사회의 통일정책 참여란 시민사회의 주체인 시민과 NGO들이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정책과정에 자신들의 견해를 통합하고자 영향력을 행사하는

39) B. Barber, *Strong Democracy: Participatory Politics for a New Age*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pp. 154~155.

40) 송정호, 앞의 글, 2006, p. 268.

전반적인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 통일문제에 대한 정부, 시민 그리고 그 밖의 통일관련 이해당사자와 이익집단, 기업들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상호성립과 동시에 상호침투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제기되는 민주주의의 '과잉'내지 '투입의 과다' 라는 지적은 지나친 엘리트들과 관료들의 기득권 유지라고 할 수밖에 없다.

참여민주주의는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취약점이 되는 대의기구의 대표성, 호응성, 책무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해결방안으로 시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정책결정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이론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참여민주주의는 시민의 직접적인 통제를 중시하며, '시민의 주권'을 주창하는 대중주의와과도 관련되며, 또 시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입법과 정책결정의 정통성을 중시하는 직접민주주의를 포용하는 개념이기도 하다.<sup>41)</sup> 참여민주주의에서 진보된 심의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입법과 정책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시간 여유를 갖추어 토의에 의해 신중하게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형태로서 고려된다. 그래서 심의민주주의는 정책대안들에 대한 심사숙고를 고양시켜 효율적이고 공정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의 통로를 확대시킴으로써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공공정책결정에 대한 채널을 증가시켜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평등주의 원칙을 유지하는 이중의 효과를 창출한다.

통일교육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의 다양한 공급자와 수요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분명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지지'해 줄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이다. 통일교육의 소비자이며 생산자인 일반시민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참여는 쟁점에 대한 창의적이면서도 상이한 정의와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이다. 통일교육의 소비자이며 생산자인 일반시민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참여는 쟁점에 대한 창의적이면서도 상이한 정의와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며, 대의기구의 대표성·호응성·책무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sup>42)</sup>

이제 통일교육의 시발점은 분단의 원인과 과정을 객관적으로 인식시키고 분단의 현실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인지하고 이를 통해서 분단국가의 현재성을 파악하며, 나아가 통일에 대한 역사성을 토론하고 역사적인 삶의 주체자로서의 참여를 통한 토론과 숙의의 교육과정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만이 정치교육이론과 아울러 통일수업개념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발전될 수 있는 것이다.

토론과 숙의를 통해, 통일이 나의 일상과 생활세계의 정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라는 점, 그리고 통일이 단순한 민족적 과제라기보다는 나를 억압하고 있는 분단 질서의 재구성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토론과 숙의를 통한 통일 논의의 심화와 주체화 그리

41) 위의 글, p. 281.

42) 송정호·조정아, 앞의 글, p. 181.

고 다원화는 새로운 문제 영역의 개방과 이에 입각한 다양한 실천의 활성화를 가져온다. 개개인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그 결정에 대해 자신이 책임질 수 있도록 민주적 정치체제에 대한 통일교육을 통해, 정치교육이 그 본래적인 기능을 할 것이며 그 속에서 공동체의 덕성과 개체의 자유가 살아 움직이게 될 것이다.

### 3. 통치(Government)가 아닌 협치(Governance)

통일교육 접근은 민-관 협력체제를 갖추는 일이 바람직하며, 특히 관 주도(민주평통, 통일부)형에서 민간이 지원하는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민간 주도쪽으로 통일교육을 추진해가야 할 것이다. 통일 준비와 통일 이후의 한국사회를 견인할 세력은 정부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그러서도 안되고 그럴 필요도 없다.

시민사회의 개념은 시대와 입장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었으나, 시민사회는 국가의 강제력이 배제된 시민상호간의 관계로 정의할 수 있다.<sup>43)</sup> 즉 시민사회는 사회적 관계를 담지하는 하나의 현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한 인간 주체들의 존재와 상호작용을 구성하고 전제하는 사회적 실천을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과 정책적인 추진은 많은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 사전에 시민사회와 토론과 심의를 거치고 이들이 주도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면 그 사회의 정책적인 수행능력은 훨씬 강력한 효능감을 가져올 것이다. 시민사회는 「공론의 장」을 기반으로 하는 「공중권(public sphere)」을 형성하여 시장영역과 정부영역에 대해 민주주의적 압력을 행사한다.

거버넌스(Governance)는 오늘날 국가·시장·시민사회 영역의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설명해 주는 용어이다. 최근 국가의 역할 축소에 따라 통치(government)는 협치(governance)라는 개념으로 대체되고 있는데, 일부 국내학자들은 국가에 의한 다스림이라는 「통치」 개념에 대비하여 자치와 참여를 통하여 함께 다스린다는 의미에서 「공치(公治)」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일본 학계에서는 협력해서 다스린다는 의미로 협치(協治)로 번역하고 있다. 즉 거버넌스의 개념은 기업과 시민사회가 국가영역에 침윤(浸潤)하여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의 영향력의 약화와 시민사회, 시장의 영향력이 증가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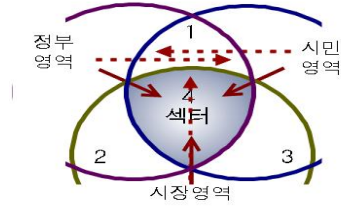
〈그림 1〉은 정부중심적인 기능주의의 모습이라면 〈그림 2〉는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경제사회인 시장의 영역이 동시에 작동하며, 이는 새로운 다양성과 공공성이 만나게 되는 4섹터를 생산해내는 과정을 보여준다. 4섹터는 미래의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토대이자 도구가 되기도 한다.

43) 임혁백, “민주화 시대의 국가-시민사회의 틀 모색,” 최창집·임현진(편), 『시민사회의 도전: 한국 민주화와 국가·자본·노동』(파주: 나남, 1993).

<그림1> 기능주의적 모형



<그림2> 사회관계적 모형



통일 담론의 활성화와 더불어 통일 교육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교육통치(government)가 아닌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교육협치(governance)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은 사유화된 권력을 압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44)</sup> 통일론과 통일교육이 한국사회의 현재성을 해결하고 미래의 담론을 자기화하고 공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되기 위해서는 지배성이나 독점성이어서는 안 된다.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한국민의 인식을 현실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비전을 만들고, 구체적인 통일과정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냄으로써 통일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에너지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은 과거 정부중심의 '통치'(government)행위가 지배적인 근대국가로부터 오늘날 탈근대사회의 포괄적 '협치'(governance)방식이 확산되는 변화과정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통일'과 같은 특수하고 민감한 분야에서 시민참여에 기초한 정책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시민참여<sup>45)</sup>에 기초한 통일정책과정 자체가 국론을 지연시켜 비용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이념적 양극화 때문에 오히려 정치위기를 더욱 조장한다고 비판한다.<sup>46)</sup> 그러나 이는 기우이자 버려야할 시각이며 접근이다. 통일논의와 통일정책은 시민들이 삶의 공간변경에 대한 커다란 그림이다. 이러한 그림을 그리는데 왜 밑실에서 몇 명이 결정해야 하며 왜 엘리트의 고민만이 더 높은 담론을 만들어낸다는 사고에 집착하는 것은 권위주의적인 발생이라고 할 것이다.

이제 한국사회는 엘리트와 지도자들의 관점보다도 훨씬 더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정부의 통치행위는 점점 제한적으로 되어가고, 이에 반비례하여 시민사회의 영역의 자율성과

44) 조성범, "교육통치 아닌 교육협치를," <http://news.eduhope.net/news/view.php?board>. (2011년 5월 7일 검색)

45) OECD는 정책과정에 시민을 관여시키는 것은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위한 핵심적 요소라고 설명한다. 시민참여는, ① 정부로 하여금 보다 광범한 정보, 관점 및 해결방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정책결정의 질을 향상시키고, ② 시민과의 상호작용 증진에 대비하고 보다 나은 지식관리를 보장하여 정보사회의 도전에 대응하며, ③ 시민들의 소리가 전달되어 정책과정에서 고려되기를 바라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시민의 투입을 정책과정으로 통합하고, ④ 투명성과 책무성 증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시민의 요구에 대응하며, ⑤ 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OECD, *Citizens as Partners: Information, Consultation, and Participation*(OECD, 2001).

46) 송정호, "21세기 통일정책 환경 변화와 시민참여," 통일정책연구, 15권 1호, 통일연구원, 2006, p. 275.



책임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물론 시민사회의 효과성으로 인한 영역확대는 정부의 통치행위와 유기적 관계를 맺을 때에만 최대한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앞으로 대학에서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은 단순히 정부와 국가제도의 안정성 확보와 더불어 정책적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동원할 수도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국가 사회에서 자율성, 국민 스스로의 권익과 의무에 대한 인식, 책임 있는 행위 그리고 자발성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전달하고 정치과정에 대한 참여와 능력을 촉진시키고 장려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사사건건 보수언론의 발목잡기는 계속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신중한 접근으로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는 것도 필요하며 보다 중요한 것은 추진하려는 정책이 국민적 합의를 얻는 것이다. 색깔론과 포퓰리즘 논란에 휩쓸리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국민으로서 국민 여론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정책, 국민과 함께 논의하고 추진하는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독일정치교육의 원칙으로 제시되었던 「보이텔스바흐 협약」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을 갖는 서독의 교육학자들이 정치교육에서 정치적 갈등과 논쟁에 대한 접근방식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합의점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기초해서 1976년 정치교육의 기본 원리에 관한 최소합의를 이룬 것으로, 다음의 세 가지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강압금지 조항으로 이는 교수자가 의도하는 견해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준비되지 않은 학습자에게 강요하듯이 가르치는 것과 학습자의 “독자적인 판단의 획득”을 방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둘째, 균형성과 대립적 논점의 확보로, 이는 학문과 정치에서 대립적인 것은 수업에서도 대립적인 것으로 나타나야 하며, 상이한 입장과 선택가능성을 무시하거나,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을 언급하지 않는 것을 경계한다. 셋째, 학습자의 권한위임(empowerment)로서, 이는 학습자는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고유한 이해관계 상태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sup>47)</sup> 이러한 원칙들은 비단 독일의 정치교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통일교육에도 유의미한 원칙이 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교육적’ 원칙들이 견지될 때 학습자 스스로 객관적 복한 이해의 균형점을 찾는 일이 가능해질 것이다.<sup>48)</sup>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통일교육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심의 민주주의적 실현 방안으로서 시민참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가 통일정책과정에서 시민에 대한 ‘정보제공’과 형식적인 ‘시민협의’제도를 확대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정책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토의할 수 있도록 심의민주주의적인 ‘적극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일반시민들이 통일교육 쟁점들에 대하여 진지하게

47) Bernd H. Binger,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의 기능과 역할,” 민주시민교육의 비전과 제도화(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5), p. 62에서 재인용.

48) 조정아, 앞의 글, p. 294.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관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통일정책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단순하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만 주거나 각종 위원회에 대표로 참여할 권리만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일반시민이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설계에 참여하고, 이러한 참여는 통일교육의 방향과 의제가 미리 결정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sup>49)</sup>

통치는 단순하고 명쾌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오늘날의 복잡한 연계구조와 다층구조 하에서의 결정은 다수를 포함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협치인데 지금까지의 비대칭구조를 통해서 엘리트와 지도자들이 얻었던 방식은 버려져야 한다. 통일정책과 교육도 마찬가지이지만 제반 의사결정에도 적용될 가치이자 원리이다. 통일교육의 협치 시대의 도래는 통일교육 분야에서 시민사회 시대의 개막을 의미한다. 시민사회의 통일 교육정책 영역에 대한 관여는 정부의 복합 협치적 역할이 모색되는 가운데 제도적으로 정립될 수 있다.

#### 4. 대학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대학교육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대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공간을 확장하고, 교육방법을 보다 다양화·다변화해야 한다. 그 좋은 예로서 〈대학생 모의 유엔대회〉 과 같은 토론을 통한 교육모델을 제시한다. 여러 통계에 나타난 대로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실에서 통일교육의 내용이나 접근의 재정립이 중요하다. 토론대회를 통해 학생 스스로 의제를 선택하고 자료와 정보를 수집, 처리하며, 여러 사람과의 토론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정립해 나가는 과정과 훈련을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통일문제를 한반도의 현실과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서 균형 있게 인식하고 정치적 논리와 정권의 변화를 넘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의제의 선택이 자유로워 오랫동안 이념적, 국내 정치적 편향에 의한 선택 즉 주로 핵, 군사 등 안보문제와 경제협력, 인도적 지원문제에 주로 치중했었지만, 모의 유엔회의의 다양한 주제처럼 현재의 남북한이나 통일한국이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발굴하고 깊이있게 천착함으로써 대학생으로서 통일에 관한 판단과 선택의 폭과 깊이를 확장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한 능력개발을 통해 통일국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비전을 바탕으로 북한 실상에 대한 객관적 서술과 남북한의 당면 과제, '글로벌' 의제에 대한 실태 및 정책방향을 파악할 수 있고, 통일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는 개선안으로서 전자매체 활

49) 송정호·조정아, 앞의 글, 2009, p. 181.

용 등 강의방법의 개편, 북한 전공자 이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 강의 교육자들의 강의능력 향상이 절실하다. 학생들의 동기 부여와 자발적 참여를 통한 교육개선 차원에서 전국 혹은 지역단위 대학별로 다양한 학생경연대회 및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통일 문제에 대한 대학생의 관심과 참여가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통일교육이 민족적·국가적 과제에 대한 국민 열망을 수렴하고 민주적 통일정책 수립과 이행을 위한 기반으로서도 매우 중요함을 인식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두 번째는 대학의 교과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평화교육 등의 교과목으로 확장하여 정규과목으로 설장한다. 통일교육은 대학교육 등 교과과정에서 정규 혹은 비정규 강의과정으로 오랫동안 운영되고 있으나 교양과목 등의 필수학점 이수를 제외하고는 점차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관련 과목뿐 아니라 보다 다양하고 개방적으로 민주시민교육/평화교육 등의 교과목의 설장을 위해 학교당국과 교수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일반 강의시간을 통해 홍보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세 번째는 신뢰와 소통을 위해 북한 이탈주민/다문화가정/유학생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많은 학생들은 아니지만 이미 대학에 북한 이탈주민들 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다. 이들과 소통이 북한사회의 이해를 위한 첫 번째 걸음일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출신의 학생들과의 소통과 공존하는 법을 배우고 그러한 이후에 그들과 상호성을 갖기 위해서는 신뢰가 우선이라는 것을 학습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한계는 지나친 '단일성'과 '동일성'에 의해 타자에 대한 배타성에 익숙하다는 점이다. 한국인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수직적인 불신"과 "수평적인 분과성"을 극복하는 길만이 통일과 통합을 이룩할 수 있는 신뢰구축의 첫 번째 선행과제이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는 지금까지 권위주의적인 정권에 의해 이용되었던 정치교육을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다. 정치교육은 민주적인 시민을 육성하고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자기실현 보장을 기본이념으로 하기 때문이다.

## V. 결 론

지금 대학은 신자유주의와 물질주의와 공동체적 개인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이들에게 현재 통일교육은 부재하며 통일된 국가이념과 북한이해를 위한 교재도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필자가 대학교육을 통한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통일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을 강조한다. 체제·이념적 접근방법과 사회·문화적 접근방법을 병행하여 남북한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북한은 대화의 상대방이며 협상의 대

상이다. 협상의 조건과 대화를 통해 서로의 접점을 구해가는 과정이다. 너희는 우리보다 열등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무조건 와야 한다는 협상과정은 불가능한 일이다. 한국의 선택가능한 정치적 선택은 북한을 개방체제로 유도하며 또한 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확대를 지원내지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와 한국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나와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능력과 자세가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보았을 때, 이러한 능력은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협치”와 “참여”를 훈련하고 개발함으로써 함양할 수 있다고 본다.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은 국가적 통치(government)에서 포괄적 거버넌스(governance)로 변신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치적 목적과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으며 통일환경 조성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교육이 교육적 효과와 더불어 사회적 의미와 통일에 대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 첫째 대학의 계몽이나 훈육이 아닌 교수대상의 인정과 교수학습방법의 다양화를 추구해야한다. 실용주의적으로 경도된 현재 대학구성원들이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참여를 증가시켜 공동체의 가치와 이타주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와 적극적인 활동에 초점을 맞춘 공동체의 가치를 제고하는 개방적 민족주의와 참여적 민주주의의 가치가 개입되는 교육적 노력이 이루어져야한다. 셋째 대학의 기능은 시장과 개인의 역할과 기능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것은 아니다. 고교졸업자의 80%가 대학진학을 하는 한국적 구조에서도 대학 본연의 연구기능을 활성화하여 통일교육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대학이 전국적/지방적 통일교육 연계망을 이루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넷째 사회적 통합과 신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대학내 사회적 연대망을 확충하고 개선해야 한다.

필자가 제시하는 대안은 대안일 뿐 정답은 아니다. 어느 연구자가 한국사회에 대해 대학에 대해 통일교육에 대해 맞춤형 정답을 만들 수 있겠는가? 우리가 더 많이 고민하고 더 자주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뿐이다. 통일교육이 통일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남북한 통일을 추구하고 통일국가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통일교육이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또 해야 한다.

통일에 대한 규정력을 갖는 것은 통일교육이 아니라 국제정세와 남북관계라는 정치적 역학관계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통일의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사회의 질과 통일 과정의 가속도는 남북한 주민들의 통일역량에 좌우되고, 통일역량은 제대로 된 통일교육에 의해 함양될 수 있다. 오늘날 대학이 처한 현실이 열악하지만 그를 분석하고, 그에 기초한 통일의식의 제고를 통해 대학통일교육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 《참고문헌》

- 강대현, “시민사회, 한국시민사회 그리고 시민교육,”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Vol. 9,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2004.
- 고병헌, “통일을 만드는 평화교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자료, <http://www.kcrc.or.kr>에서 인용.
- 고부응, “한국의 대학과 미국: 미국대학과 한국대학의 기업화,” 『한국의 대학과 세계』, 중앙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한독문화연구소 2009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9.
- 국정홍보처,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서울: 국정홍보처, 2006.
- 김누리, “주식회사 유니버시티-대학의 기업화와 학문공동체의 위기,” 『안과박』, 2009.
- 김병로, “남북통합지수의 함의, 쟁점, 활용방안,” 『남북통합지수를 통해 본 남북관계의 현실과 전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주최 발표자료집 (2010년 8월 11일), p. 3.
- 김인영, “한국사회와 신뢰: 후쿠야마와 퍼트남의 논의의 재검토,” 『아시아지역연구논총』, 2집, 1호, 한국세계지역학회, 2008.
- 김태형, 『불안증폭사회』, 서울: 위즈덤하우스, 2010.
- 문용린, “학교통일교육의 새로운 전개방향: 교사를 위한 참고자료,” 『한국교육개발원 도덕교육연구실』, 1998.
- 민경국, “신자유주의와 사회적 다원주의, 어떻게 다른가,” 매경이코노미, 2006년 08월 02일
- 박길성, “사회갈등과 공동가치의 모색,” 『사회갈등의 진단과 선진적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사회과학협의회, 2010.
- 박명규, “통일연구와 통합지수: 지수화의 방법론과 이론적 과제,” 『통일과 평화』, 제2집 2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10.
- 박명규·이근관·전재성(외), 『연성복합통일론』, 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2010.
- 변종헌, “대학 통일교육의 역설과 활성화 방안,” 『윤리연구』, 제78호, 한국윤리학회, 2010.
- 송정호, “21세기 통일정책 환경 변화와 시민참여,” 『통일정책연구』, 15권 1호, 통일연구원, 2006.
- 송정호, “통일정책과 시민참여 현황,” 『시민사회와 NGO』, Vol. 3, No. 1,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05.
- 송정호·조정아, “이명박 정부의 통일교육정책과 통일교육 거버넌스의 개선방향,” 『평화학연구』, 제10권 제1호(2009), 한국평화연구학회.
- 우석훈, 『촌놈들의 제국주의』, 서울: 개마고원, 2008.
- 윤황,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국민윤리연구』, 제58호(2005).
- 이규영, “독일의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국제지역연구』, 제9권 3호, 한국의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05.
- 이우영, “대학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새로운 통일담론의 필요성,” 미발표원고, 1999.
- 임혁백, “민주화 시대의 국가-시민사회의 틀 모색,” 최창집·임현진(편), 『시민사회의 도전: 한국 민주화와 국가·자본·노동』, 파주: 나남, 1993.
- 전재성, “통일 환경의 변화와 통일논의의 필요성,” 『21세기 한반도 정세 변화와 통일의 비전』, 통일

〈동북아연구〉

- 및 대북정책 학술회의,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정용길, “동서독 정치교육의 비교,” 『분단국 통일론』, 서울: 고려원, 1989.
- 조정아, “통일교육의 쟁점과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추병완, “학교 통일교육의 평화교육적 접근,” 『인문사회교육연구』, 제6권, 춘천교육대학교, 2003.
- 한국교육개발연구원, 「고등교육 보편화에 따른 고등교육 재구조화 및 질 제고 방안」, 교육인적자원부, 2003.
- 한국대학신문, 2007년 한국대학생의식조사.
- 허영식,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운영체계,”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Vol. 2, No. 1,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1997.
- Bernd H. Binger,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의 기능과 역할,” 『민주시민교육의 비전과 제도화』,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5.
- 「조선일보」, 2007년 6월 25일자.
- 「중앙일보」, 2010년 6월 9일.
- Barber, B., *Strong Democracy: Participatory Politics for a New Age*, Berkel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 Bundeszentral für politische Bildung, 2003. *Jahresbericht 2002/2003*. Bonn.
- Coleman, James S., “Social Capital in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upplement(1988).
- Fung, Archon and Eric Olin Wright, “Thinking about Empowered Participatory Governance,” in Archon Fung and Eric Olin Wright(eds.), *Deepening Democracy: Institutional Innovations in Empowered Participatory Governance*(London: Verso, 2003), p. 5.
- Michel, W., & Zitzlaff, D.(Hrsg.), *Handbuch zur politischen Bildung*, Bonn: BpB, 1988.
- Morgenthau, Hans J., *Politics Among Nations*, New York: ALFRED ·A·KNOPF, 5th edition, 1973.
- OECD, *Citizens as Partners: Information, Consultation, and Participation*(OECD, 2001).
- Wiener, Antje, Thoman Diez, *European Integration Theor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Abstract》

## A Study on the Way to Improve the Unification Consciousness in University Education

Lee, Kyung-Hee

This paper has analyzed how university education on unification had to be formalized under the prevalence of neo-liberalism, which is a structural aspect of the Korean society. Through this analysis, the paper hopes to obtain a healthy framework in which university education can seek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for education on unification. While university education must prevent indoctrination of political ideologies and strive for desirable agendas, the education has unfortunately become formalized according to the ruling party and vested interests. Such formalization has continued to this day.

Thus, the paper points out the structural limitation imposed by university education which focuses on functionality, as well as neo-classical discourse, devises to overcome the lack of appropriateness of abstract discourse on unification under the current education paradigm.

Civil education and unification education in universities in Korea are emphasized because they enhance the efficiency of, and obtains legitimacy for, the political system. Also, such education integrates the society and prepares next generation of civil citizens for developed democracy. However, such functional needs cannot be met under the current educational environment which concentrates solely on career development and simple transfer of knowledge. Perhaps the root of the current problem is structural, in that unification issue has become externalized on specific values. However, we can also specify other roots of the problem, namely that South Korea is a trade-oriented country and that certain groups have privatized social values and norms.

This paper argues that the Korean society should break away from oppressive and exclusive dominance on constituents and that it should rather learn how to resolve conflicts through trust and communication, in order to achieve substantial democracy. Simultaneously, university education on unification should take epistemological approach

<동북아연구>

the subject, not that of enlightenment. Furthermore, it should do away with emphasis on homogeneity which entails persuasion instead of acceptance of others. Lastly, unification education should convert tnsel from a "government" activity to the post-modern, more comprehensive "governance" process.

Key Words : Unification education in university. Functionality of university. Neo-liberalism.  
Civil education. Post-modernism. Comprehensive governance.

투고일 : 2011.6.25 / 심사일 : 2011.7.10 / 심사완료일 : 2011.8.28